

보호할 수 없다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2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공공분야 중심 -

2022.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 총괄 담당관]

목 록

번 호	제 목	분 야
1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 정의
2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도 되는지?	다른 법률 규정
3	시·군·구청이 사업승인 서류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지?	
4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수집 이용 제공
5	치안유지, 수색·구조 등 직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6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수집한 아동의 정보를 타 기관에 공유할 때 정보주체에게 사전고지해야 하는지?	
7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8	통장이 전입 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해도 되는지?	
9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영업 신고 담당 부서가 보관 중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10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	
11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12	공단의 임원 채용 관련 자료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13	자체 감사를 위하여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지?	
14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15	수당 지급 및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16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촬영한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	
17	학교가 졸업생 명부를 총동창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번 호	제 목	분 야
18	얼굴 사진이 생체정보에 해당하는지?	민감정보
19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지?	
20	교통공사가 여객의 유실물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 번호
21	개인 또는 단속 권한 없는 공공기관 등이 교통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영상 정보
22	기존에 운영 중인 CCTV에 다른 목적을 추가할 수 있는지?	
23	비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24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위탁
25	SNS 등을 통한 이벤트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26	정보주체가 CCTV 열람을 요구할 때 법적 의무사항은?	열람
27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할 수 있는지?	삭제
28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해야 하는지?	안전조치
29	엑셀 등 상용프로그램의 비밀번호 설정이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해당하는지?	
30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권한 없는 다른 직원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유출
3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예외
32	군부대에서 각종 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33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목적으로 지방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본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일반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표현이 일부 생략된** 경우가 있고, **법령이 약칭으로 기재된** 예도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사망자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 사망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사망자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유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망자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때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입수 가능성’은 결합에 필요한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시간, 비용, 기술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는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2. 사회복지요원이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도 되는지?

공공기관 또는 복지관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이 민원인 또는 복지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므로
 - 사회복지요원의 자원관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은 「병역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 「병역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요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는 할 수 없고
 - 해당 기관에 안전성 확보 조치가 되어있고 근무지 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에서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임무 및 단순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 처분을 받게 되고 2회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으면 같은 법 제89조의3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 만약 사회복지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9조의4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3. 시·군·구청이 사업승인 서류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관리처분 인가신청 서류를 관할 시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이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경우 관할 시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군·구청에 제출한 명부를 조합원이 시·군·구청에 열람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는지는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제12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124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에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정보공개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시·군·구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은 없음
- 해당 법률에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시·군·구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4.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연락처와 주소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 시행령·직제 시행규칙·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의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의미함
-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8항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2항 및 제8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연락처와 주소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5. 치안유지, 수색·구조 등 직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실종자 수색 및 범죄예방 순찰 등의 업무 목적으로 해경이 드론으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각 기관별 직제 시행령·직제 시행규칙·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의 다른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 등을 의미하며
 -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진압·수사, 해양에서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작성 등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므로
 -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의 드론을 이용한 영상 정보 수집에 관한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1-002호 참조)에서 대구지방경찰청이 인명구조 등의 수색과 구조 현장을 지휘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른 업무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 경찰 인력의 투입만으로는 수색에 한계가 있기에 CCTV 영상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도 요구조자의 위치 파악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드론캠을 이용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음

6.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수집한 아동의 정보를 타 기관에 공유할 때 정보주체에게 사전고지해야 하는지?

교육부·교육청·지원청·학교 등(이하 '교육부 등')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수집·발굴된 정보를 공유받아, 이를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 보호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 주체에게 정보의 출처와 내용 등을 사전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수집한 아동의 정보를 교육부 등에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교육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제공 동의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사안에서 교육부 등이 공유받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 아닌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중 ‘제15조 제1항 제2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유 받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 규정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출처·내용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음

7.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7항의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 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 시행령·직제 시행규칙·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의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 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의미함
 - 또한,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7항은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보장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보장기관은 지역사회보장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8. 통장이 전입 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해도 되는지?

전입신고를 한 주민에 대해 통장이 주소지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전입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 통장이 주소지 방문, 전화 등으로 전입을 확인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한 사실조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9.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영업 신고 담당 부서가 보관 중인 사업자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경관디자인과가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영업 신고 담당 부서(보건정책과)에서 수집하는 사업자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을까요?

-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부서가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사업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하부조직 간 개인정보의 제공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4-051호 참조)
- 또한,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전통지 및 부과처분을 위하여 위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 「옥외광고물법」 위반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등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영업 신고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행정청 또는 검사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영업 신고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0.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

청사 방호·보안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수집한 직원의 출입 기록을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청사 방호·보안 및 사고 예방 목적으로 수집한 청사 출입 기록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호 참조)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4-050호 참조)에서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인사청문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요청되는 자료에는 개인에 대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며
 - 인사청문은 공직 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등을 사전적으로 살펴 공직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고 국회가 소관 업무인 인사청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과 관련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인바,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나
 - 제출대상이 되는 자료는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고 자료의

제공이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바, 국회의 제출 요구 자료가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자료의 제공이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과 해당 자료와의 관계, 인사청문 대상의 중대성 및 구체성, 정보주체와 인사청문 대상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검토한 바 있음

- 따라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과 해당 자료와의 관계, 인사청문 대상의 중대성 및 구체성, 정보주체와 인사청문 대상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의 제출 요구 자료가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자료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인정보처리자인 해당 기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함

11.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업무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국회법」 제128조는 국회가 국정감사 등과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과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국정감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보고, 서류 및 사진·영상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며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0-223호, 제2019-11-177호, 제2019-17-272호 참조)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 국회의 제출 요구 자료가 국정감사 등에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자료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인정보처리자인 해당 기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이용할 수 없다고 의결한 바 있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7-012호 참조)

12. 공단의 임원 채용 관련 자료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공단이 신규 임원 채용 시 임용대상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지방의회는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지방의회의 안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확한 안전의 심의 및 준비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8-125호, 제2020-102-003호 참조)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경우에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조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개인의 비위 사실이나 특혜 등 특정 개인과 관계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8-014호, 제2021-108-015호 참조)
- 따라서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신규 임용대상자의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지방의회의 제출 요구 자료가 안전심의 또는 감사·조사 등에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자료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인정보처리자인 해당 기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함

13. 자체 감사를 위하여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직원 중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등의 부당 수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 청사 방호·보안 목적으로 수집한 해당 직원의 출입 기록을 자체 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호 참조)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1. 출석·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감사기구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자체 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0조 제5호에 따른 복무 감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감사법에 따라 소속 직원의 복무 감사 등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공공감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감사를 위하여 제출 받은 자료의 감사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호) 참조)

○ 이에 비추어 볼 때,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자체 감사기관은 자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체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으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자체 감사가 필요한 대상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등의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입 기록만을 처리하여야 할 것임

14.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가 「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가 다른 부서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하부조직 간 개인정보의 제공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 -14-133호 참조)
- 「토지보상법」 제8조 제1항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로 등이 개설될 토지의 소유주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가 「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함

15. 수당 지급 및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무원 수당 지급 및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공무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에서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1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위임하고 있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6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고,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직장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배우자 등 직장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보수지급 이전에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에 관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 등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6.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촬영한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하여 불법 투기자가 촬영된 영상자료에서 눈이나 신체 부위를 가린 후 무단투기 장소에 공개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 수행 과정에서 촬영한 불법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지역주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반원칙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5.27. 결정 참조)
 -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 및 과태료부과를 위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해당 영상을 인근 주민에게 일대일 대면으로 확인시키는 것은 영상을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08-077호 참조)
-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하여 불법 투기자가 촬영된 영상자료에서 눈이나 신체 부위를 가린 후 무단투기 장소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개인정보 제공보다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인근 주민에게 일대일 대면으로 확인시키는 등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를 한정하여 정보주체인 불법 투기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임

17. 학교가 졸업생 명부를 총동창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를 졸업생들의 동의 없이 총동창회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 개인정보처리자인 학교가 졸업생의 개인정보인 성명을 제3자인 총동창회에 제공하려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부합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한편, 성명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비식별처리 하더라도 졸업 연도, 반 등 다른 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전에 총동창회 등에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창회에서 동창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18. 얼굴 사진이 생체정보에 해당하는지?

얼굴 사진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또는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생체정보에 해당하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
 - 얼굴 사진으로 정보주체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얼굴 사진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같이 제공되는 성명, 생년월일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체정보’를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여권이나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추출한 일반적인 얼굴 사진은 민감정보나 생체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 일반적인 얼굴 사진을 차후에 인증·식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처리할 경우 생체정보로 분류되며, 이를 통해 생성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게 됨

19.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안면 정보 또는 지문 정보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2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1.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말함
- 기관에서 수집하는 지문·안면 정보는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로서 근태 관리를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안면 정보, 생체정보를 활용한 근태 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20. 교통공사가 여객의 유실물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유실물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습득자, 신고자, 점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이 있는데, 공사가 유실물 습득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등 처리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법령 조항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유실물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등은 습득물 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습득물 신고자인 교통공사가 「유실물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습득물 신고 서식으로 습득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 아울러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에 유실물 취급기관으로 등록된 교통공사는 「유실물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신고 내용을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교통공사의 자체 「유실물 취급내규」 별지 제2호 서식인 유실물 수령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서식을 통해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1. 개인 또는 단속 권한 없는 공공기관 등이 교통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개인 또는 단속 권한 없는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통상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규정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영상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해당 교통단속 권한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3-045호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별도 안내판 등에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의 목적을 기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청과 같이
교통단속 권한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22. 기존에 운영 중인 CCTV에 다른 목적을 추가할 수 있는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또는 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CCTV의 설치목적에
교통정보 수집 목적을 추가하여 해당 CCTV를 교통정보 수집·분석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설명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
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한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교통정보 수집·분석 목적을 추가하여 병행 활용할 수 있음

23. 비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특정인들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2.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 즉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함
- 따라서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 CCTV가 설치된 장소가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하고 직원 및 허가받은 민간인 등 특정인들만 출입 가능한 장소는 ‘비공개장소’에 해당함
- ‘비공개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그 설치·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의 일반원칙이 적용됨
 - 비공개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구성원이나 출입·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 제6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비공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아울러, 안내판 설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비공개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자에게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4.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질병관리청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경우, 공단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은 법률,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위탁을 하여야 하고, ②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하며, ③ 수탁자를 교육·감독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병관리청이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여 대신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관하여 별도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25. SNS 등을 통한 이벤트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이벤트 대행사를 이용하여 기관의 SNS 이벤트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업무 위탁의 유형은 크게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업무 그 자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이 수반되는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업무 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개인정보 이전의 목적이 다르고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등 법률적 관계도 전혀 다름
- 업무 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제3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됨
-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을 구분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 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단함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 따라서, SNS를 운영하는 기관과 이벤트 대행사와의 관계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관이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위탁을 하여야 하고, ②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하며, ③ 수탁자를 교육·감독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26. 정보주체가 CCTV 열람을 요구할 때 법적 의무사항은?

민원인이 분실물을 찾을 목적으로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개인정보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및 제46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하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열람 청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위 열람에 관한 규정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며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에 따라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영상에 대한 열람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27.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할 수 있는지?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가 가능한가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거친 경우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을 ‘의무’ 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 「감염병예방법」 제33조의4 제2항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접종명·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삭제의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사실,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8항 별지 제10호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고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에서는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 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28.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해야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메시지 발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메시지 발송 대상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행정망 서버에 저장하고자 하는데, 민원인의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기술적 안전조치로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암호화의 대상과 관련하여,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보호 수준은 높아질 수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은 커지게 되므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에서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에서는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바이오정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름·전화번호 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기술에 상응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29. 엑셀 등 상용프로그램의 비밀번호 설정이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해당하는지?

엑셀, 한글 등 상용프로그램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이 보호법상 암호화에 해당하나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 이러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해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에서는 ‘파일 암호화는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 보조 저장 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 간에 네트워크상으로 파일을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Ⅲ-제2절-2.2. 업무용 컴퓨터·보조저장매체 암호화방식)
- 따라서 한글, 엑셀 등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거나,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암호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암호화 조치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음

※ 파일 암호화 후 파일 제목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것은 암호화에 해당하지 않음

30.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권한 없는 다른 직원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권한 없는 다른 직원에게 잘못 발송하였을 때,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로 볼 수 있을까요?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를 말하고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따르면 ‘유출’에는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가 포함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하며,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당해 개인정보를 모르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권한 없는 다른 직원에게 잘못 발송한 경우, 내부 직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삭제, 안전조치 등을 지시하여 오발송을 정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상태로 보기는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언론이 취재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일부 제외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의 영상 정보를 언론사에 취재·보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언론·종교단체·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란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 하므로
 - 언론사가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적용 대상으로 언론·종교단체·정당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언론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 되지 않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운영 하는 CCTV의 영상정보를 언론사에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32. 군부대에서 각종 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군부대의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 태세 2급 이상 발령, 자체 훈련, 을지·충무훈련 등의 상황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취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와 ‘공중 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목적’과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함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0-167호, 제2019-14-222호 참조)
 - 또한, 상기 결정례에 따르면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 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자체 훈련, 지상 협동 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을지·충무훈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테러 발생’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고 ‘재해·재난 및 구급 상황’은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군부대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관제센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근거하여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 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33.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목적으로 지방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목적으로 지방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이나 제18조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3-176호 참조)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통계청과 함께 개발하고자 하는 통계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나 승인통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지정통계나 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으므로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 및 결합 후 통계를 작성해야 하며, 통계작성을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하여야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 익명 또는 가명정보 처리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